

보도설명자료 (‘14. 12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중구난방식 로봇 R&D 사업” (‘14.12.1, 디지털타임스)

1. 보도 내용(요지)

- 정부의 로봇 연구개발 사업이 컨트롤타워 없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원투자 효율성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 (중기청,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등 사례 언급)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산업부 소관 로봇 R&D사업인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*은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담당PD(로봇PD)가 기획과정에서 과제의 타당성 뿐만 아니라 여타 과제와의 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음

* 동 사업내 과제는 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2~5년간 연간 10~30억원을 투자하여 원천형/제품형 기술개발과제를 수행

-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중기청,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등의 사업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사업과 차별화되는 측면이 있음

* 예를 들어 중기청 과제는 과제당 1~2억원 내외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, 기사에서 언급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내 과제도 소규모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

- 산업부는 향후에도 로봇분야 기술개발 과정에서 사업효과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
- ‘09년부터 로봇 연구기관 협의체*를 운영하여, 출연연 등의 로봇분야 과제들간 중복성 검토 및 연구성과를 공유중이며,

* 기계연구원, 전자부품연구원, 로봇융합연구원, 생산기술연구원, 전자통신연구원, 과학기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

- 범부처 로봇 R&D 투자 효율화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, 기존 로봇산업정책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 신설*을 추진중

* 지능형로봇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: ‘14.10.13

- 아울러 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창출형로봇 보급사업에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김정희 과장(044-203-4310)
정수환 사무관(044-203-4315)